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안 심사보고

##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9년 8월 20일 변채옥, 윤병국 의원 등 17명

나. 회부일자 : 2009년 8월 20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54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4차 행정복지위원회(2009년 8월 3일)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 요지

(제안 설명자 : 윤병국 의원)

### 가. 제안이유

- 올해는 우리나라가 일제로부터 해방된 지 64주년임과 동시에 우리나라가 일제에 강점당하고 굴욕적인 식민지 삶을 시작한 지 99년이 되는 해이다. 한편으로 과거 식민지의 아픔을 극복하고자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운동이 국내에서 처음으로 시작되고 진실이 규명되기 시작한지 19년이 된다.
- 그동안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은 50년의 침묵을 깨고 용기 있게 역사의 산증인으로 나섰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올바른 해결과 유사범죄 재발을 막기 위해 한국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관련 단체들과 유엔과 미주, 유럽, 아시아 등 전 세계를 돌며 활동했으며, 1992년 1월 8일부터 17년 동안

매주 수요일마다 서울 일본대사관 앞에서 개최되고 있는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정기수요시위에도 매주 참석하고 있다.

- 피해자들과 민간단체의 노력으로 인해 유엔인권위원회 여성 폭력문제특별보고관은 일본정부에게 공식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의 실시를 권고했으며, 국제노동기구(ILO) 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는 일본군 ‘위안부’는 성노예 제도로써 ILO 29호, 강제노동금지조약을 위반한 사례라고 판단하고,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본정부는 여전히 공식 사죄와 법적 책임을 다하지 않고 있으며, 강제성 부인 등 역사를 거꾸로 끌고 가려하고 있다. 뿐만 아니라 ‘위안부’는 ‘매춘부’라든지, ‘돈을 벌기 위해 자원한 여자들’, ‘아시아태평양전쟁이 침략전쟁이 아니라 해방전쟁’이라는 등의 망언이 정치가들 및 사회지도층에서 계속 되고 있으며, 이에 대해서 일본정부는 전혀 제지하지도 않음으로써 제2, 제3의 인권침해를 자행하고 있다. 또한 역사교과서에서 일본군‘위안부’ 문제를 삭제하여 가르치지 않음으로써 젊은 세대들에게 거짓 역사를 교육하고 있다.
- 국제사회는 이러한 일본정부와 일본사회를 향해 정의실현을 요구하고 있다. 2007년 7월 30일, 미국 하원에서는 일본정부에게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에게 사죄하라는 결의서를 채택했으며, 네덜란드와 유럽연합 의회, 캐나다 의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공식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

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2008년에는 대한민국 국회와 대만 국회에서도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했다.

- 일본 국내에서도 변화의 움직임이 일고 있다. 2008년 3월부터 전국 각 지방자치단체 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를 향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성실히 해결할 것을 요구하는 결의서를 채택하고 있으며, 시민들은 일본정부가 직접 피해자에게 사죄하고 배상하게 하도록 일본국회에서의 입법을 위해 활동하고 있다.
- 한편, 피해자들은 80세 이상의 고령이어서 나날이 사망자가 늘고 있으며, 한국정부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생활안정지원법 대상자 234명 중 벌써 2/3 이상이 사망하여 이제 91명이 생존해 있다. 생존해 있는 피해자의 경우에도 고령과 ‘위안부’ 후유증을 안고 있어서 하루빨리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시급성을 안고 있다.
- 우리 부천시는 일본의 가와사키시, 오카야마시 등 2곳의 지방자치단체와 우호도시 관계를 갖고 있으며 교환공무원 파견, 도시축제 참가, 시민교류 등 남다른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런 관계를 바탕으로 역사교과서 문제가 생겼을 때는 우호도시의 시민단체들이 연대하여 왜곡교과서 불채택운동을 전개하는 등의 관계로까지 발전해 왔다. 현재 부천시와 우호도시 관계를 맺고 있는 도시에서도 양심적 시민세력에 의한 시의회 결의서 채택운동이 전개되고 있으며 시의회 내에서도 이 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고 있는 시점에 부천시의회의 결의는 그들의 운동에도 큰 힘이 될 것이다.

- 현재 부천에도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가 생존해 계시며, 최근 몇 년 사이에 3명의 피해자 할머니들이 일본정부의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하고 돌아가시기도 했다. 부천의 시민사회단체를 중심으로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활발한 활동도 지속되어오고 있다. 부천-가와사키 청소년 역사포럼 ‘하나’는 지난 10년 동안 이 문제를 포함한 한·일 과거사 문제를 주제로 연구·토론을 하고 있으며, 여성단체들도 월 1회 일본대사관 앞 수요 집회에 참석하고 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다룬 영화를 상영하는 등 다양한 방식으로 활동하고 있다.
- 이제 부천시의회가 나설 때이다. 국·내외 모든 상황을 고려할 때 지금이 일본군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는 가장 적절한 기회임이 확실하다. 부천시의회가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을 채택하여 일본 내 우호도시를 비롯한 관계 요로에 전달함으로써 일본정부와 일본국회가 하루속히 문제를 해결하는 길을 만드는데 힘을 모으고자 한다.

나. 주요내용 : 결의문 첨부

3.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4. 토론요지

가. 반대토론 : 없음      나. 찬성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촉구하는 결의문

의안 번호	제444호
의결 년월일	2009. 9. 8. (제154회)

발의년월일 : 2009. 8. 20.

발의자 : 변채옥·윤병국  
의원등17인

부천시의회는 우리나라가 과거 일제에 의해 불법적으로 강점당하고 식민지로서 굴욕적 삶을 강요당했던 지난 역사를 기억하며 특히, 많은 여성들이 일본군 '위안부'로 강제 동원되어 성노예로서 인권을 유린당했던 잊지 못할 역사를 기억하고 있다.

부천시의회는 지난 19년 동안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국내는 물론 국제적 관심을 일으키며 활동해온 피해자들과 민간단체들의 노력을 지지·격려하고, 그동안 일본정부에게 사죄와 법적 배상, 올바른 역사교육 등을 요구·권고했던 라디카 쿠마라스와미 유엔인권위원회 여성폭력문제특별보고관의 권고와 게이 맥두걸 유엔인권소위원회 특별보고관의 전시 조직적 강간, 성노예제 및 그와 유사한 관행에 관한 보고서, 이 외에도 수차례에 걸쳐 일본정부에게 법적 책임을 권고했던 유엔 기구들의 결의와 ILO기준적용위원회 전문가위원회의 보고서 등을 적극 지지한다.

또한, 미국, 유럽연합, 네덜란드, 캐나다, 대만 등 여러 나라 의회에서 채택된 사죄와 법적 배상, 역사교과서 기록 등을 요구한 결의서와 2008년 10월에 채택된 대한민국 국회에서의 결의

를 지지하며,

2008년 3월, 일본 효고현의 다카라즈카 시의회에서 일본정부와 국회에 일본군 ‘위안부’ 문제의 성실한 해결을 요구하는 결의채택을 시작으로 도쿄 키요세시의회, 삿포로시의회 결의채택 그리고 2009년도 후쿠오카 시의회, 오사카 미노오시, 도쿄 미타가시, 도쿄 고가네이시, 교토 교토나베시 의회에서 채택된 “위안부 문제에 대한 일본정부의 성실한 대응”을 요구하는 청원과 의견서를 환영한다.

부천시의회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의 요구와 국제사회의 권고를 받아들이지 않고 있는 일본정부와 일본국회의 태도에 심각한 우려를 표명하며, 하루속히 일본정부가 국제사회의 권고를 이행하여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을 회복시키기를 촉구하는 87만 부천시민의 뜻을 대변하여 다음과 같이 결의한다.

1. 일본정부는 1930년 전쟁부터 1945년 패전에 이르기까지 우리나라와 아시아태평양지역의 소녀와 여성들을 연행하여 일본군 성노예로 만든 비인도적 범죄사실에 대해 공식 인정하고 진실한 사죄와 역사적이고 법적인 책임을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한사람이라도 더 살아 있을 때에 사죄와 배상을 실현할 수 있도록 행정적, 입법적 제도를 신속히 마련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정부는 일본군 ‘위안부’ 와 같은 유사범죄의 재발을 막기

위해 일본역사교과서에 진실만을 올바르게 기록하고, 현재와 미래 세대들에게 교육할 것을 촉구한다.

1. 일본국회는 일본군 '위안부' 제도에 대한 진실규명과 피해자에 대한 공식 인정, 법적 배상을 실현시키기 위한 특별법을 하루속히 제정할 것을 촉구한다.

1. 가와사키시의회와 오카야마시의회는 상호 선린과 친선을 도모하고 있는 우호도시로서 일본국 내의 선도적인 지방자치단체와 보조를 맞추어 일본정부와 일본국회가 상기 요구들을 수용할 수 있도록 의견을 모아 줄 것을 촉구한다.

1. 대한민국 정부는 지난 19년 동안 유엔과 미국, 유럽, 아시아 등 세계를 돌며 일본군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피해자와 민간단체의 노력을 지원하고, 일본정부가 공식 사죄, 법적 배상 및 역사교과서 기록을 이행하도록 외교적, 행정적 노력을 다할 것을 촉구한다.

이와같이 부천시의회는 피해자들 및 시민들과 함께 일본군 '위안부' 문제가 올바르게 해결되어 피해자의 명예와 인권이 하루속히 회복되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을 기울일 것이며,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이 겪은 희생과 고통이 후세대에는 반복되지 않고, 평화와 인권이 보장될 수 있도록 기억하고 교육하는 일에 힘쓸 것을 다짐한다.

2009년 9월 일

부천시의회 의원 일동